

## 97년 노동경제전망

남 기 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자본측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sup>1)</sup>,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30대그룹 기초실장회의에서 주요 그룹 사들은 임금총액 규모를 동결하기로 결의하였다.<sup>2)</sup>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부득이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고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드디어 자본측이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해 '고용 감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측의 언급이 단순한 위협용 이야기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최근 여기저기에 서 이러한 고용불안의 조짐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는 안방극장 드라마의

---

1) 이외에도 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인건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임금은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게 되었다.

2) 최근 전경련 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회장부터 말단사원까지 5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금융기관이 금리를 일본이나 대만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금융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식의 긴급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12.5).

주제가 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소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하의 강제퇴직<sup>3)</sup>, 내년도부터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정리해고제에 대한 재계의 강한 애착<sup>4)</sup>, 현저히 줄어든 대졸 신입사원들의 취업문<sup>5)</sup> 등.

이러한 조짐은 통계상의 수치로도 확인된다. 1995년 1/4분기, 2/4분기의 수치와 1996년 1/4분기, 2/4분기 수치를 비교해 보면 1980년대이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은 60.3%, 62.7%에서 60.2%, 62.6%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실업률은 2.4%, 1.9%에서 2.2%, 1.9%로 정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sup>6)</sup>.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실업률이 1995년, 1996년의 2.0% 수준에서 내년에는 2.4%로 악화되어 8만 여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고용불안의 문제는 먼 나라 혹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

3) 올해 9월 이후 선경인더스트리, 한국유리, 미원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된 명예퇴직의 열풍은 최근 각기업의 정기인사철과 맞물리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그룹의 경우 조직 통폐합을 통해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삼성항공, 아남산업 등도 인원축소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마다 차량유지비의 삭감, 업적급의 축소, 의료비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노동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복지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12.5, 1996.12.9).

4) 최근 정부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60일전에 조합과 노동자에게 통고한 뒤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는 신기술 신공정의 도입과 산업구조 변경, 생산규모 축소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침체의 합법적인 대량해고 조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대졸 신입사원 원서접수를 마감한 18개 대기업그룹의 경쟁률은 평균 21.4 대 1로 지난해 15 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11.11).

6) 통계청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인 실업률이 상승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업률은 통상) 경기보다 9-10개월 가량 뒤에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안정화되어 있던 실업률이 내년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11.23).

7) 민간연구소들에서도 내년도 실업률이 2.3-2.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나라 지금 현재 우리의 발등에 떨어지려 하는 불인 것이다.

올 하반기 이후 고용불안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경기침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그리며 진행된다.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도표화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략 4-5년을 주기로 경기가 변동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996년과 1997년의 자료는 실제치가 아니라 잠정치 혹은 전망치이긴 하지만 1994-95년을 정점으로 하여 최근 경기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기별 숫치를 통해서도 확인되어 진다. 실질 GDP 성장률은 1995년 1/4분기 10.0%, 2/4분기 9.7%, 3/4분기 9.8%를 정점으로 하여 1995년 4/4분기 6.8%, 1996년 1/4분기 7.9%, 2/4분기 6.7%, 3/4분기 6.4%로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4/4분기에도 6.4% 대의 성장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8)</sup>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5년 15.9%에서 1996년 상반기에는 3.8%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더욱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sup>9)</sup>. 또한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10월까지 195억달러에 달한 적자규모는 연말까지 220억 달러에 이르고 내년도에도 180억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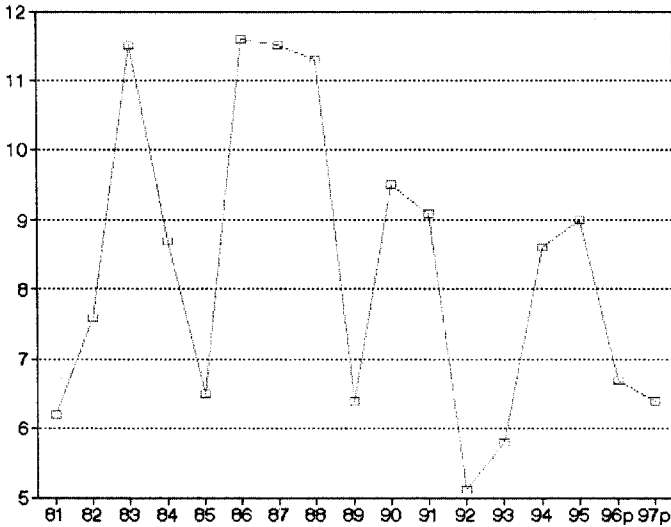
---

다. 한화경제연구소는 2.4%, 대우경제연구소는 2.3%, 현대경제사회연구소는 2.4%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높은 실업률이 가장 큰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12.9).

8) 한국은행 관계자는 “성장률이 3-4% 수준으로 떨어졌던 다른 경기수축기와는 달리 이번엔 성장률이 5% 이하로 낮아지는 급격한 경기수축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6%를 전후한 저성장기조가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장기화 현상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6.11.29).

9) 전경련이 발표한 「97년도 30대그룹 시설투자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설비투자 규모는 44조9천4백24억원으로 올해의 추정실적 44조6천9백42억원에 비해 불과 0.6% 늘어났는데 그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같은 증가율은 30대그룹의 시설투자가 작년의 경우 39.8%나 늘어났고 올해도 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주 : 1996년과 1997년 자료는 KIET 예상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6. 4/4.  
 KIET, 「KIET 실물경제 REVIEW」, 1996.10.15.

그렇다면 이처럼 최근 들어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물론 1960년대 후진국 상태로부터 지금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제의 수출 지향적 성격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세계경제의 동향이 우리 경제에 즉각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게 된다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의 경기침체도 1995년 중반 이후에 나타난 엔저 현상의 지속, 세계교역량의 둔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소재가격의 하락과 같은 대외여건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

론 내년에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가격이 안정세를 띌 것으로 보여, 대략 내년 4/4분기 이후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기대 섞인 전망이 정확히 맞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번의 경기침체가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11)</sup>.

대외여건의 변화란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직면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가격이 다소 낮다는 것 이외에 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각 매스컴에서 일제히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나 물류비, 금융비용 등이 다른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수출품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 매스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경쟁상대

---

10)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이처럼 수출이 다시 호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작년 4/4분기 이후 진행된 기업들의 투자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를 둔 것이다(KIET, 「KIET 실물경제 REVIEW」, 1996.10.15).

11)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하여 정부부문 내에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8일 내년도에도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이 같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인 29일 통계청에서는 올 하반기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상태가 경기저점에 육박한 것이고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11.30)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연구소나 민간연구소들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KIET에서는 6.4%로, 대우경제연구소에서는 6.0%로, LG경제연구원에서는 6.3%로 전망하고 있다. (KIET, 「KIET 실물경제 REVIEW」, 1996.10.15,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국내경제전망 1996. 3/4 - 1997. 4/4」, LG경제연구원, 「경제전망」, 1996.9.)

국에 비하여 높고 이것이 수출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고비용의 구성항목 중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제외한 물류비나 금융비용 등을 단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의 임금억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측은 이번 노동법 개정 분위기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시킬 수 있는 정리해고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여러 독소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시키고 여러 가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본측의 시도가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각 매스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여론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내년도의 노동운동을 보다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경쟁상대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통상 임금수준의 국제비교시 자주 이용되는 나라는 대만이다. 한국과 대만 두 나라의 임금관련 지표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표에서 우선 명목임금을 비교해 보면 1987년에서 1995년간 한국은 임금수준이 연평균 14.9% 상승한데 비해 대만은 연평균 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만에 비해 절대 임금액이 낮았던 한국의 임금수준은 1995년 현재 1,457달러로 1,225달러인 대만에 비해 오히려 1.2배 가량 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대만에 비해 연평균 5% 정도 더 올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1.0% 증가한데 비해 대만의 경우 7.8%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역시 1990년에서 1996년 사이 한국은 6.5% 인상된 데 비해 대만은 3.7% 만이 인상되고 있다. 결국 이 기간 한국과 대만의 임금상승률 상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나 물가의 차이로 거의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고,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상

승하여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진다<sup>12)</sup>.

<표1> 한국과 대만의 임금관련 지표 비교  
(1987-95년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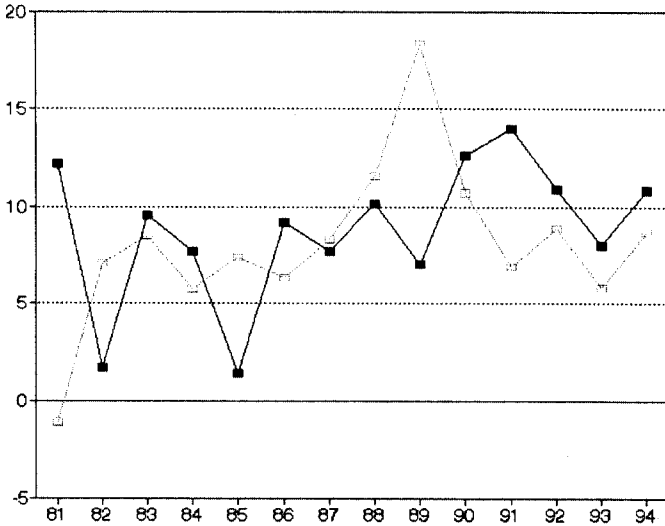
	한국	대만
명목임금 증가율	14.9	9.9
실질임금 증가율	8.2	6.5
노동생산성 증가율	11.0	7.8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1996. 3/4. 에서 재구성.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크게 올랐다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도 크게 증가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사실상 ‘우려할’ 정도도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 연도별 실질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도표화한 <그림 2>를 보면, 1988년과 1989년 두 해를 제외하고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밑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높은 임금수준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업이나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12) 그 동안 정부나 자본측에서 주장해온 생산성임금제란 노동자의 임금을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을 합한 액만큼 인상시키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율이 고정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급격한 임금인상 추세는 물가가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인(?)’ 이윤을 축소시키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의 경우 물가 통제에는 집값 상승 등의 요인이 포함되지 않아 물가가 노동자의 생계비 변동을 정확히 반영해주지 못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생활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2> 연도별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제조업)



주 : 실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점선은 실질임금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6.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침체 현상과 이에 편승한 자본측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강화는 내년도 임단투를 비롯한 제반 노동조합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실제 고용감소로 이어질 경우 노동운동권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sup>13)</sup>.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공공부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측의 임금억제정책의 강도가 보다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폭은 올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내년도 하반기에 대통령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그 외 여러

1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노동운동은 무엇보다도 경기하강시에 발생하는 고용불안정 현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점에 최우선의 과제가 부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상황들은 노동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LSI